



‘공정경선’ 맞잡은 손 6·4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사진위 왼쪽부터 강운태, 윤장현, 이흥섭)·전남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이석형, 주승용) 예비후보들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광역단체장 공직후보신청자 면접을 앞두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스

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 면접

새정치연합 경선일정 시작…10일부터 본격 경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사무총장)는 4일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와 전남 등 호남지역 후보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어 강원도와 제주도 등 나머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은 5일 실시했다.

면접관들은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각오와 지방정부 운영 계획 등을 물었으며, 후보들은 인사 말을 한 뒤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경선 후보는 “내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과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으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낙연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그것을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거나 재고할 여지는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후보 심사기준은 여론조사가 30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면접(20점) ▲전문성(15점) ▲정책성·당 기여도(15점) ▲도덕성(10점) ▲공익·사회활동(10점) 등의 순이다.

공천위는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이르면 6일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후보자를 결정하고 오는 10일께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이름 “넣어” “못넣어”

새정치연합 광역의원 경선 여론조사 직함 게재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의원(시·도의원) 경선률에 여론조사 50%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직함을 놓고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직함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후보 경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합당하면서 새정치연합 측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이 ‘안철수 의원’ 이름이 포함된 경력 사용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측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의원 경선과정에 여론조사 50%가 포함될 경우 대표 경력 사용을 놓고 후보들 간 힘 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대표 경력이 주를 이뤘고, 사용여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경력이

들어갈 경우와 이를 제외했을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가 많게는 15%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사용됐던 직함은 두 전직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각종 ‘특보’ 직함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일부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는 과거와 달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 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이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측 예비후보 상당수는 안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을 대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의 경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사용했던 직함이거나, 안 의원의 싱크탱크였던 ‘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 또는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연합’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진 만큼 이러한 경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부 예비후보들의 주장이다.

광역단체장과 달리 소규모의 선거구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인지도와 경력에만 의존해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역의원 경선 과정에 사실상 여론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응론’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들은 직함에 따라 지지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들의 실체와 표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가급적 공론조사 100%만으로 경선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론조사가 경선에서 강행된다면 여론조사 대표 경력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 공천심사 여론조사 때 대표경력 표기 기준과 관련, 특정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을 여론조사 경선용 대표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임의적 또는 한시적이거나 설립 1년 미만인 기구나 단체의 경력은 허락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직 역량·토론 능력이 승패 가른다

새정치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공론조사 50%

예비후보들 학연·지연 총동원 배심원 확보 총력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물론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공론조사 선거인단(배심원단) 투표가 50% 이상 반영될 전망이다

인 가운데 후보들의 ‘조직’과 ‘토론’ 능력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 캠프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총동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호적인 배심원 확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각 후보 진영에서는 조직 능력을 가동, 중앙당 콜센터의 배심원 선정 시기에 맞춰 우호적 유권자들에 전화 대가 등을 요청, 배심원단에 대거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하부 조직을 가동,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중립적 유권자들을 알아내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우호적 배심원단이 당일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확인 전화는 물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 편의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 진영에서는

배심원단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체 배심원 가운데 20% 이상을 투표 이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직 역량을 가동, 전체 배심원에서 30% 이상을 우호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배심원단 경선이 이뤄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각 후보 캠프에서는 시민 배심원단의 20% 정도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의원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다. 300~500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지역구에서 조직 능력이 강한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 조직이 강한,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도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후보들의 토론 역량은 배심원단 투표에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박빙의 판세를 보이고 있어 배심원단 투표에 앞선 토론에서 실수를 하거나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중립적 표심을 얻지 못하면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광역의원 경선도 후보들의 상대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자기 소개(PT)나 토론 역량이 배심원들의 최종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배심원단 투표가 최소 50% 정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단 후보들의 조직 역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후보들의 토론 역량도 중립적 배심원단의 표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선거 출마 현직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당·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

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

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